



07-24 (통권 255호)

2007.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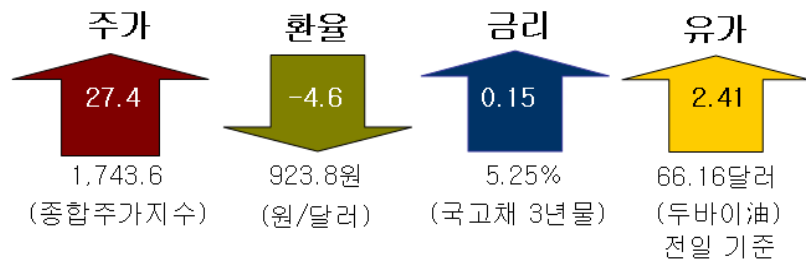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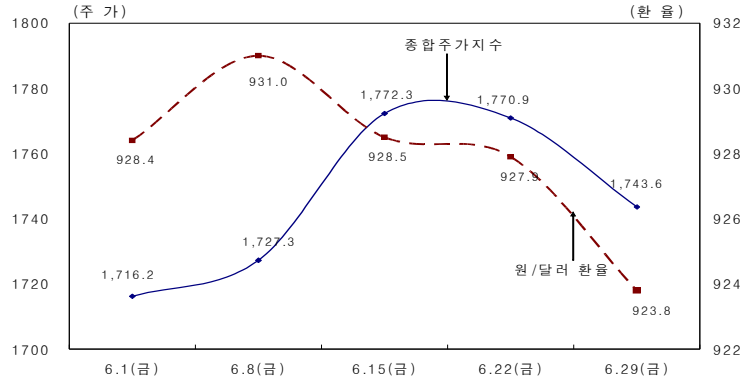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일본 고용 시장 회복 원인과 시사점

## 月間 主要 經濟 指標 (6.1~6.29)

**BETTER THAN  
THE BEST!**



##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일본 고용 시장 회복의 원인과 시사점	1
월간 경제 동향	16
□ 실물 부문 : 내수 회복세 지속	16
□ 금융 부문 :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강세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일본 고용 시장 회복의 원인과 시사점

#### 1. 최근 일본 고용 시장의 특징적 변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일본의 고용 상황은 최근에 들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빠르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 고용 시장의 특징으로는 **첫째 전체 실업률이 하락하는 점을 들 수 있다.** 2007년 4월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4.0%로, 이는 일본 역대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2002년의 5.4%보다 1.4%p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업자수도 2002년의 359만 명에서 2007년 4월 현재 268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청년 실업 문제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20~29세 연령대의 실업자수는 2002년 109만 명에서 2006년 82만 명으로 27만 명이 감소(전체 실업자 감소분 84만 명의 32.1%)하였는데, 중요한 점은 청년 실업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9세 연령대의 실업률은 2002년 8.0%에서 2006년에 6.7%로 하락하였다. (2006년 한국의 동일한 연령대 실업률은 7.7%)

**셋째 비자발적 실업이 급감하고 있다.** 실업 동기별 항목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실업이 감소한 반면 자발적 실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4월 전체 실업자의 43.5%를 차지했던 비자발적 실업자는 2007년 4월에 33.6%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졸업후 미취업 항목에 해당되는 실업자수는 2002년 4월 20만 명에서 2007년 4월에는 17만 명으로 감소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대비 졸업 후 미취업 비중은 7.0%에서 6.4%로 축소)

**넷째 제조업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전반적인 고용 시장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과 내수 관련 산업의 고용 상황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6년에 들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특히 2007년에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전형적인 내수 관련 업종도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취업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수가 2003년 4,598만 명에서 2007년 4월에 4,794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일용직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122만 명에서 10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체 취업자에서 이들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7.5%에서 2007년 4월 현재 13.5%로 낮아져 있다.

## 2. 일본 고용 시장 회복의 원인

**(노동 수요 측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대되었다.** 일본의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진국인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이후 한국의 설비투자율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신규 공장 설립 건수는 2002년 844건에서 2006년에 1,78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고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단칸 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신규졸업자 채용 계획 규모는 2004 회계연도에 약 36만 8,000여 명에서 2007 회계연도에는 52만 1,000여 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노동 공급 측면) 양질의 일자리 증가세에 맞춰 가계 부문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가계 부문이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및 취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998년 6,793만 명에서 2004년 6,642만 명으로 151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7년 4월 현재 6,7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의 활력 정도와 향후 고용 시장의 개선 지속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4년 60.4%에서 2007년 4월에 60.8%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제의 실질적 고용창출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률(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 비중)도 같은 기간 57.6%에서 58.4%로 급증하였다.

**(인구 구조적 측면)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기업들의 인력 선점 동기를 들 수 있다.** 일본 사회는 지난 1970년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중 7%~14%)에 도달하였으며, 1994년에는 고령 사회(Aged Society, 14%~20%), 2005년에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에 진입하였다. 특히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의 경우 2007~2009년의 기간 동안에 정년퇴직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일본 경제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 확대의 최근 고용 시장 추세를 거스르고, 정규직 비중 확대를 통해 노동력을 선점하려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일본 TDB(TEIKOKU databank)의 2007년 2월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9,849개사중 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17.2%인데, 이중 정규직 비율 증가 이유에 대해 24.2%가 '2007년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들고 있다.

**(시장 구조적 측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된 것도 고용 확대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출범 이후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 규제 완화 정책이 단행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고용 불안정성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 활동,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종신고용-연공서열로 대표되는 일본형 고

용 구조가 크게 약화되어, 일본 전체 취업자중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83.6%에서 2000년에는 74.0%, 2007년 1/4분기에는 66.3%로 하락하였다.

**(정책적 측면) 일본 정부의 다각적인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고용 시장 안정 정책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고용 창출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 새로운 기업 시스템 도입, 각종 규제 철폐 등과 같은 투자 관련 규제 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특히 수도권 투자 규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공업등제한법, 공장재배치법과 같은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 3. 한국 고용 정책에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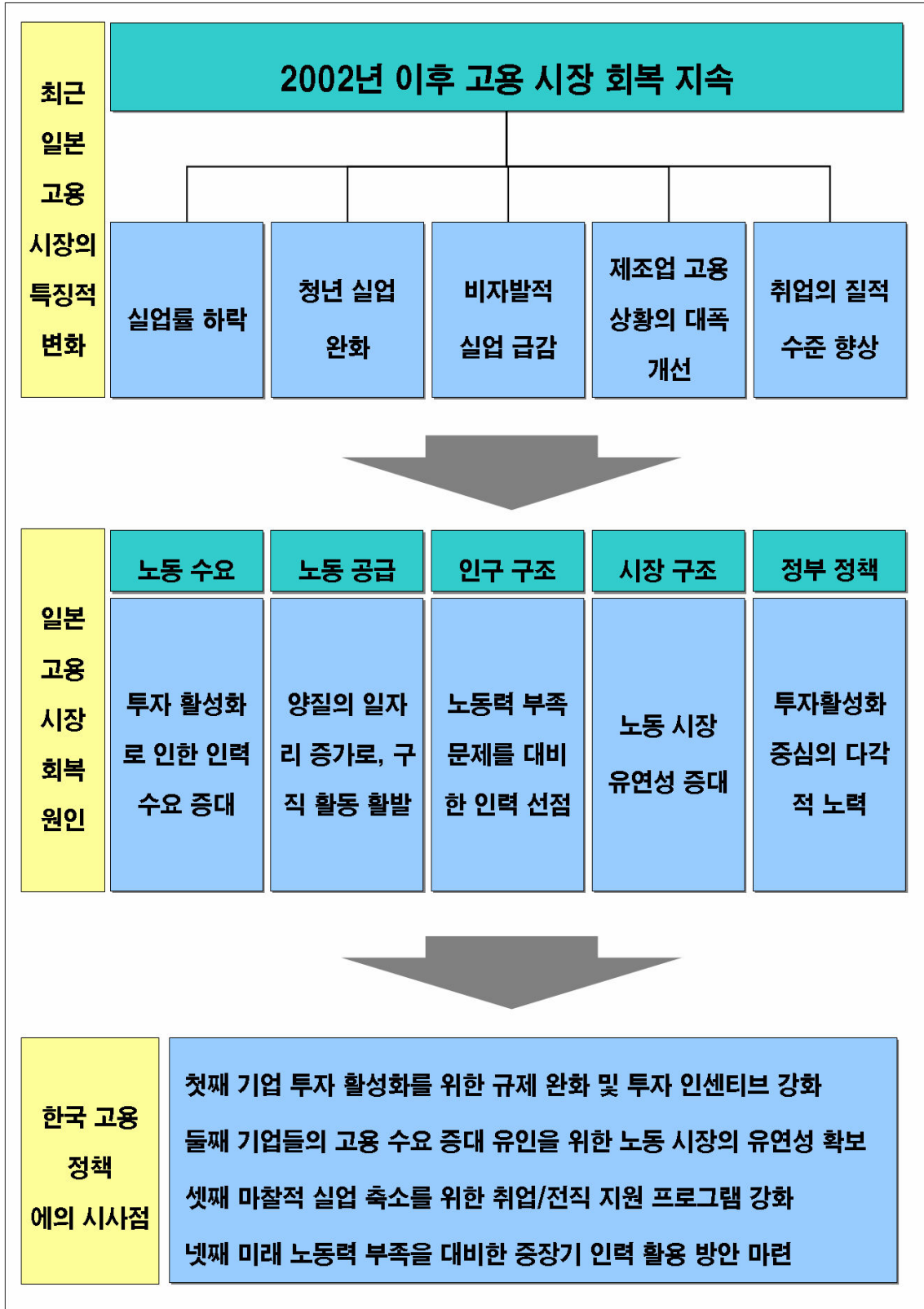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면,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같은 투자 관련 제도의 획기적 완화, 법인세 등의 조세 감면 제도 확대, 노사 분규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노사간 자율 교섭 문화 정착 유도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는 ‘기업 투자 활성화 패키지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현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상,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 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고용이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기업들이 부담 없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취업/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불안 심리를 제거하고, 마찰적 실업을 축소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실직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취업 정보 시스템 강화, 빠른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노동력 수요가 증대된 이후의 실효성 있는 중장기 인력 활용 정책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청년 노동력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요자 위주의 대학 교육 과정 개편, 직훈 제도의 내실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육 육아 시설 확충, 직장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 폐지 유도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임금 피크 제도, 순환 근무제, 자문역 제도 활성화 등 새로운 노동 형태를 다양하게 발굴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일본 고용 시장 회복의 원인과 시사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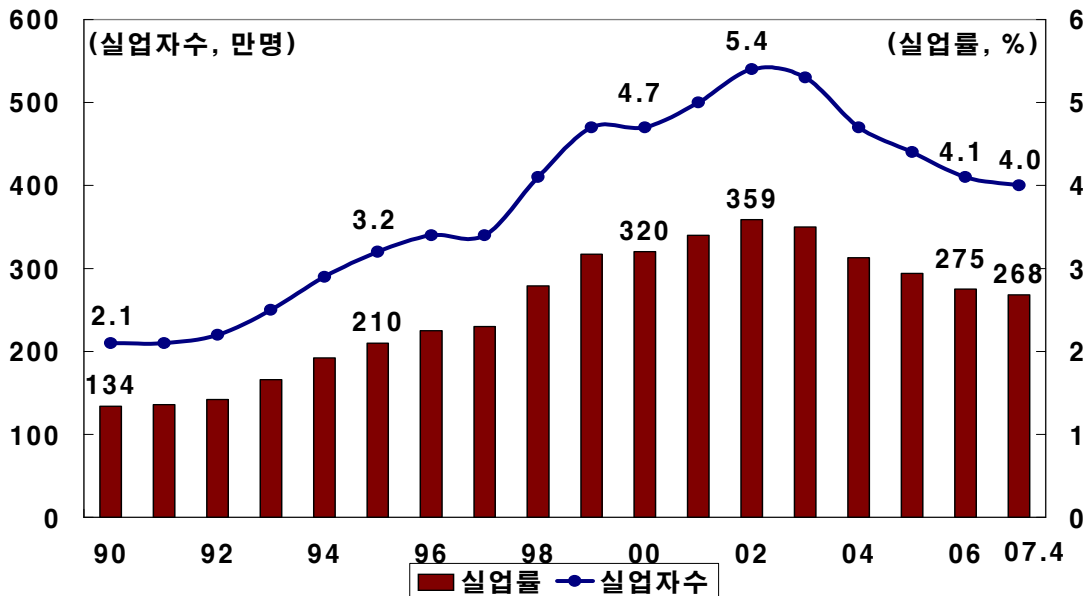
1. 최근 일본 고용 시장의 특징적 변화

○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일본 고용 시장은, 2002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냄

- 실업률 하락 : 2007년 4월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4.0%로 이는 일본 역대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2002년의 5.4%보다 1.4%p가 하락함

- 실업자수 감소 : 실업자 수의 경우에도 2002년의 359만 명에서 2007년 4월 268만 명으로 크게 감소함

< 일본의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 참고 > 한국의 전반적 고용 시장 추이

- 한국의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2000년 4.4%에서 점차 낮아져 2006년에 3.5%, 2007년 5월 현재 3.2%를 기록함
- 한국의 실업자수는 2007년 5월 현재 77만 9,000명이며, 2000년에는 외환위기, 세계 IT 버블 붕괴 등의 영향으로 97만 9,000명을 기록한 바 있음



○ (청년 실업 문제 완화) 특히 그동안 일본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청년층 실업 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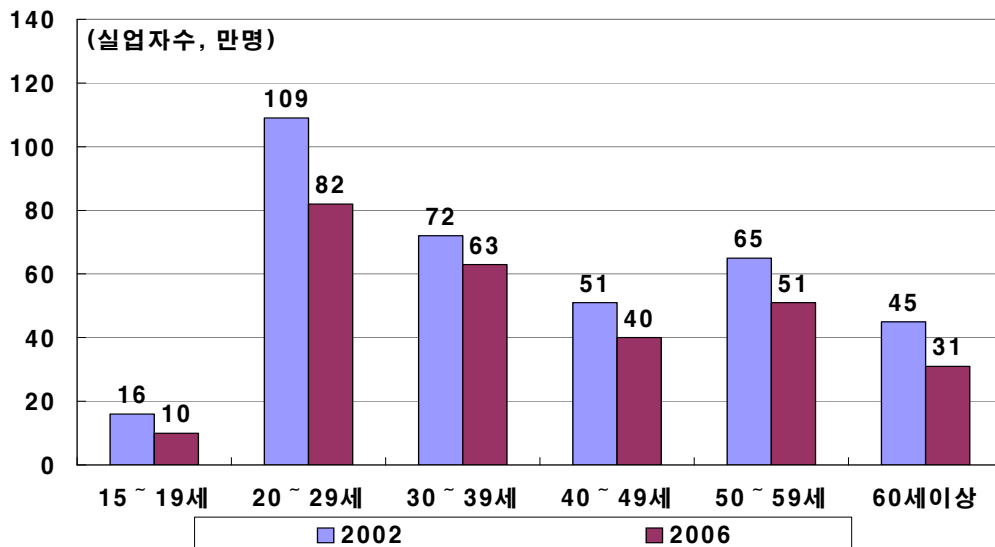
- 청년 층 실업자수 감소 : 20~29세 연령대의 실업자수는 2002년 109만 명에서 2006년 82만 명으로 27만 명이 감소함 (2006년 현재 전체 실업자 대비 29.8% 비중)

.이는 2002년에서 2006년 전체 실업자 감소분 84만 명의 32.1%에 달함

.그 다음으로는 같은 기간 60세 이상 연령대가 14만 명, 50~59세 연령대가 14만 명, 40~49세 연령대가 11만 명의 순서로 감소함

- 청년층 실업률 하락 : 이에 따라 20~29세 연령대의 실업률은 2002년 8.0%에서 2006년에 6.7%로 하락함

< 일본의 연령대별 실업자수 추이 >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 참고 > 한국의 청년 실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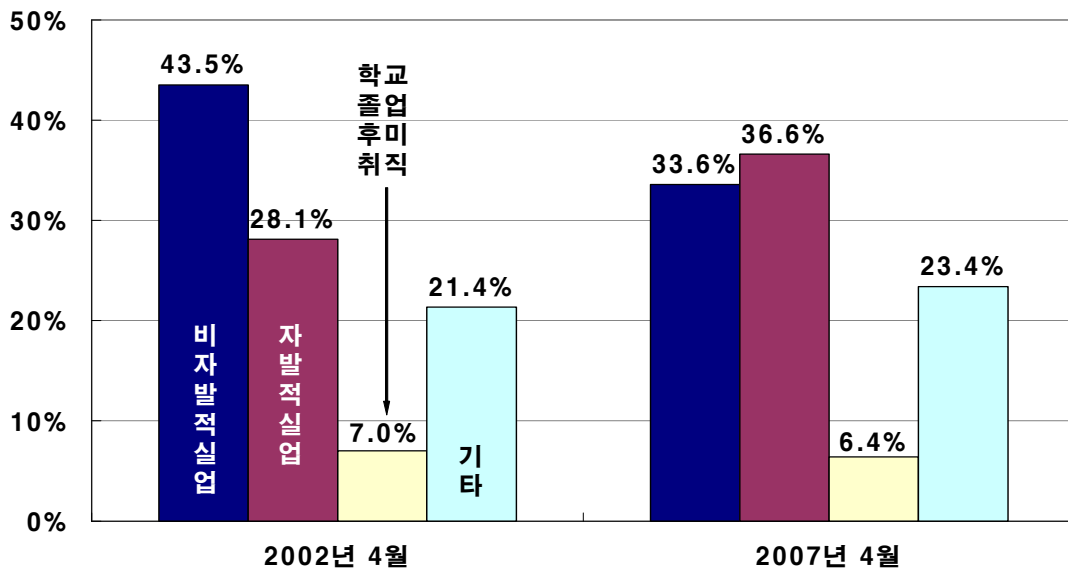
- 한국의 20~29세 연령층의 실업자수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7.2%에서 2006년 41.1%로 증가
- 한국의 20~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2000년 7.5%에서 2006년 7.7%로 상승



○ (비자발적 실업의 급감) 경기 부진에 따르는 비자발적 실업이 감소한 반면 자발적 실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비자발적 실업자 급감 : 2002년 4월 전체 실업자의 43.5%를 차지했던 비자발적 실업자는 2007년 4월에 33.6%로 크게 감소
- 졸업후 미취업자수 감소 : 2002년 4월 20만 명에 달했던 미취업 졸업자수가 2007년 4월에는 17만 명으로 감소됨 (또한 같은 기간 미취업 졸업자 비중은 7.0%에서 6.4%로 축소됨)

< 실업 이유별 실업자 비중 및 실업자 수 >



(단위 : 만 명)

	비자발적실업자 非自発的な離職による者	자발적실업자 自発的な離職による者	졸업후미취직 学卒未就職	기타 사유 その他の者
2002년 4월	161	104	26	79
2003년 4월	153	122	30	76
2004년 4월	127	106	26	73
2005년 4월	104	111	25	66
2006년 4월	95	103	22	61
2007년 4월	89	97	17	62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 (제조업 고용 상황의 대폭 개선)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 시장 개선세가 2006년에는 제조업 부문으로 확산되고, 2007년에 들어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내수 관련 산업도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반전됨
  - 제조업 취업자 증가 : 일본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5년까지 감소세를 지속 하였으나, 2006년에 1.7% 증가하고, 2007년 4월에도 0.9%가 증가하는 등 개선 추세가 지속됨
  - 내수 산업 취업자 증가 : 또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전형적인 내수 관련 업종도 2007년에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은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의료·복지업 등은 산업 종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의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

	2003	2004	2005	2006	2007 4월
건설업	-2.3	-3.3	-2.7	-1.6	-0.5
금융·보험업	-4.7	-1.2	-1.3	-1.3	-3.2
제조업	-2.0	-2.4	-0.7	1.7	0.9
정보통신업	3.1	4.9	2.3	2.8	5.4
음식·숙박업	-2.2	-0.9	-1.2	-1.7	4.8
도·소매업	-1.0	-0.9	-0.1	-0.8	1.6
운수업	2.5	-2.7	-1.9	2.2	1.0
부동산업	-4.1	0.0	5.6	5.3	6.9
의료·복지업	5.9	5.8	4.1	3.3	5.5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 참고 >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추이

-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5개월간 감소세를 지속
- 이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수는 같은 기간 425만 명에서 411만 명으로 감소

○ (취업의 질적 수준 향상)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성 항목별로는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 비중이 축소됨

- 근로자 수 증가 : 2005년까지 5,300만 명대 수준에 머물렀던 근로자 수는 2006년에 들어 5,472만 명, 2007년 4월 현재 5,544만 명으로 증가  
· 상용근로자 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 수 감소 : 한편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7.5%에서 2007년 4월 현재 13.5%로 낮아짐

< 일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

(단위 : 만 명)

	취업자	근로자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1997	6,557	5,391	4,791	475	125	772	376
2000	6,446	5,356	4,684	552	119	731	340
2001	6,412	5,369	4,677	570	122	693	325
2002	6,330	5,331	4,604	607	120	670	305
2003	6,316	5,335	4,598	615	122	660	296
2004	6,329	5,355	4,608	631	115	656	290
2005	6,356	5,393	4,631	650	112	650	282
2006	6,382	5,472	4,702	659	110	633	247
2007. 4	6,444	5,544	4,794	643	106	629	240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주 : 표상의 항목 구분은 순서대로 일본 통계 항목의 총수 (総数), 고용자 (雇用者), 상고용자 (常雇用者), 임시고용자 (臨時雇用者), 일고용자 (日雇用者), 자영업주 (自営業主), 가족종업자 (家族従業者)에 해당됨.

< 참고 > 한국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 한국의 상용 근로자수는 2000년 약 640만 명에서 2007년 5월 현재 853만 명으로 증가
- 그러나 자영업주수도 같은 기간 586만 명에서 615만 명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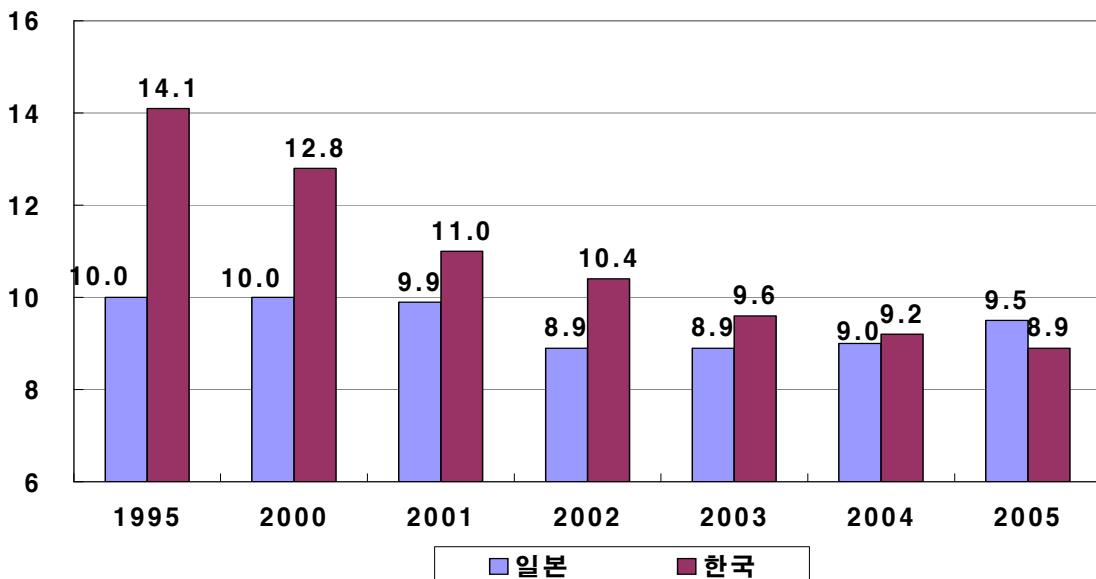
## 2. 일본 고용 시장 회복의 원인

○ (노동 수요 : 기업 투자 활성화에 따르는 인력 수요 증대) 단기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함

- 전체 설비투자 증대 : 일본의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2005년에는 중진국인 한국의 설비투자율을 상회함
- 1995년 설비투자율은 일본 10.0%, 한국 14.1%로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5년에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일본은 9.5%, 한국이 8.9%를 기록함

<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율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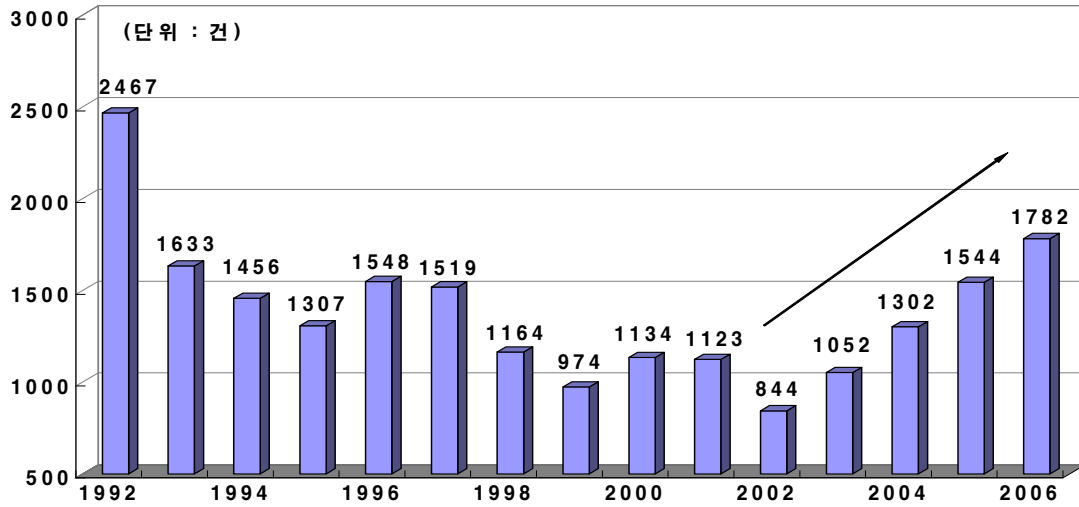


자료 : OECD.

주 : 설비투자율 = (명목설비투자 / 명목GDP) × 100.

- 일본 기업들의 투자 확대 : 일본의 공장 입지 건수를 살펴보면 일본 내 신규 공장 설립 건수는 2006년 1,782건으로 2002년의 84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 국면 초기인 1992년의 2,46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됨

< 일본 내 신규 공장 설립 건수 추이 >



자료 : 재단법인 일본입지센터, 工場立地動向調査.

- 일본 기업들의 신규 채용 확대 : 이러한 기업투자 확대는 고용 증대로 이어져, 최근 일본 내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단칸 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신규졸업자 채용 규모는 2004 회계연도에 약 36만 8,000여 명에서 2007 회계연도에는 52만 1,000여 명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
- 특히 이러한 채용 확대 계획은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를 포함한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남

< 일본 단칸 지수 중 고용 지수(Number of New Graduates Hired) 추이 >  
(단위 : 만 명)

	FY2004	FY2005	FY2006	FY2007
소기업	153,813	173,624	197,611	212,507
중기업	89,441	95,090	107,796	116,136
대기업	124,288	145,525	172,650	192,507
전기업	367,542	414,239	478,057	521,150

자료 : 일본은행, 全国企業短期經濟觀測調査 (短観, TANKAN).

- 주 : 1) TANKAN 지수중 Short-term Economic Survey of Enterprises in Japan (Number of New Graduates Hired)
- 2) 직전연도의 12월 예측치임.

○ (노동 공급 :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구직 활동 증대)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가계 부문이,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및 취업 활동을 벌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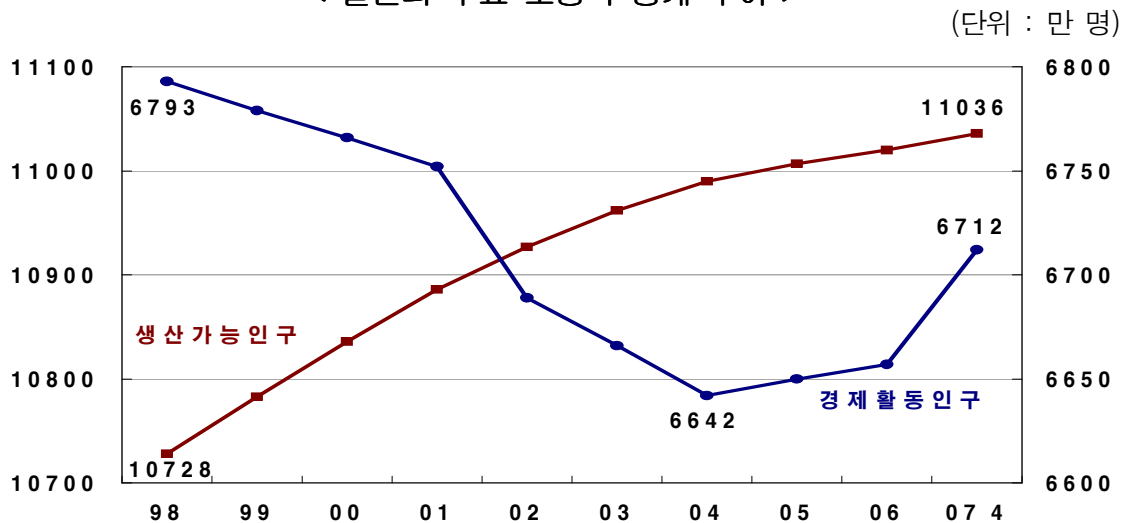
- 노동 시장 참여 확대 :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근로자들이, 최근 양질의 일자리 증대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여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나타내고 있음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는 1998년 1억 728만 명에서 2007년 4월 현재 1억 1,036만 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1998년 6,793만 명에서 2004년 6,642만 명으로 151만 명이 감소, 즉 비경제활동인구가 151만 명이 증가함

·최근에 들어서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4월 현재 6,712만 명을 기록하고 있음

< 일본의 주요 노동력 통계 추이 >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주 : 1)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말함

2) 경제활동인구 (Labor force)란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와 실업자(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함

·이에 따라 경제의 활력 정도와 향후 고용 시장의 개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4년 60.4%에서 2007년 4월에 60.8%로 증가

·특히 경제의 실질적인 고용창출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률(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 비중)도 같은 기간 57.6%에서 58.4%로 급증

< 일본의 경황률 및 고용률 추이 >

(단위 : 만 명)

	98	00	02	04	05	06	07 4월
경제활동참가율	63.3%	62.4%	61.2%	60.4%	60.4%	60.4%	60.8%
고용률	60.7%	59.5%	57.9%	57.6%	57.7%	57.9%	58.4%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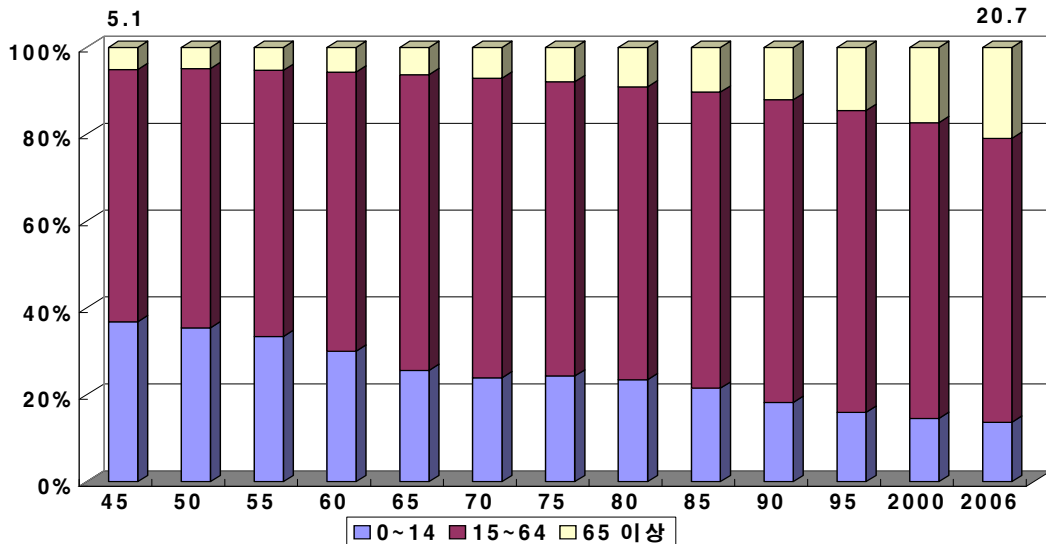
주 :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며,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 비율임.

○ (인구 구조 : 노동력 부족을 대비한 기업들의 인력 선점 동기)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사회가 고령화되어 향후 노동력 부족을 대비한 기업들의 인력 선점 필요성이 대두됨

- 일본의 초고령 사회화 : 일본 사회는 지난 197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994년에는 고령 사회, 200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이르고 있음<sup>1)</sup>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일본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현재 20.7%에 달함

< 일본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

(%)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주 : 1944 ~ 46년의 연령대별 비중은 각각 1 ~ 15세, 16 ~ 65세, 66세 이상임.

1)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 ~ 14%), 고령 사회(Aged Society, 14% ~ 20%),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로 분류하고 있음



< 참고 >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

- 2007년 현재 한국의 전체 인구(통계청 추계 약 4,845만 6,369명)에서 65세 인구(약 482만 7,785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9.96%로 추정되고 있음
- 한국도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노동력 부족 우려** : 일본의 단카이(團塊) 세대<sup>2)</sup>가 2007~2009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정년 퇴직에 직면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

·단카이 세대는 1947~49년 사이에 태어났으며, 2004년 현재 총 인구의 약 5.3%, 경제활동인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을 대비한 인력 선점** : 일본 내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여,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최근의 고용 시장 추세를 거스르고 정규직 비중 확대를 통해 노동력을 선점하려는 현상이 발생함

·일본 TDB(TEIKOKU databank)의 2007년 2월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9,849개사중 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17.2%인데, 이중 정규직 비율 증가 이유에 대해 24.2%가 2007년의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함

○ (시장 구조 :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90년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연공서열 위주의 근로관계가 약화되는 등 노동 시장 유연성이 증대된 것도 고용자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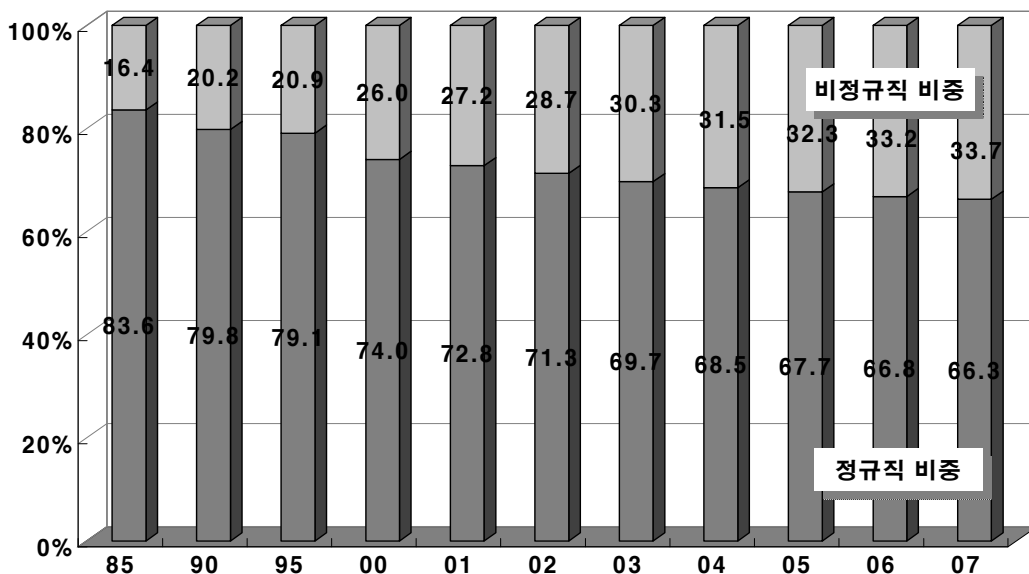
- **노동 시장 유연성 증대 정책** : 이는 장기 불황에 따르는 기업들의 경영 악

2) 단카이(團塊)는 덩어리라는 의미이며,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를 말함.

화와 더불어,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출범 이후 시행된 노동자파견법과 같은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성 확보를 통한 마찰적 실업 방지** : 또한 일본 정부는 2001년에 경제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량 실직자의 원활한 재취업과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함
  -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이직의 대상이 되는 경우, 퇴사 후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재직 중 재취업 관련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
- **노동 시장 유연성 증대** : 이에 따라 종신고용—연공서열로 대표되는 일본형 고용 구조가 크게 약화되어, 정규직 비중이 감소하고 임시직이 확대됨
  - 일본 전체 취업자중 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83.6%에서 2000년에는 74.0%, 2007년에는 66.3%로 하락

< 일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자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주 : 1985 ~ 2002년까지는 매년 2월 기준, 2003년 이후는 1/4분기 월평균 기준임.

- (정부 정책 : 일본 정부의 다각적 고용 안정 노력) 그동안 일본 정부는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투자 관련 규제 개혁 추진 : 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 새로운 기업 시스템 도입, 각종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진작시킴
  -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건전성 회복 : 금융재생법(1998년 10월, 2002년 1월 개정법 시행), 산업재생기구 설립(2003년 4월), 독점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금융건전성을 회복함
  - 새로운 기업 시스템 도입: ‘최저자본금규제 특례’, ‘중소기업 무담보융자촉진제도’, ‘LLP 제도 설립’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를 마련함
  - 투자 저해 규제 철폐 : 기업 투자 활성화를 공업등제한법, 공장재배치법과 같은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를 폐지함

< 참고 > 고이즈미 정부의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sup>3)</sup>

-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 실시 : 2003년 2월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에 의해서 자본금 1엔으로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자유로운 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됨
- 2006년 5월 회사법 실시로 인해 최저 자본금 규제가 완전 폐지
- ‘중소기업 무담보융자 촉진 제도’ 실시 : 2004년 7월에는 중소기업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시 수일 내로 융자가 가능한 ‘중소기업 무담보융자 촉진 제도’를 실시
-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사업조합) 제도 설립 : 2005년 8월 도입된 제도로 출자자가 출자액만 책임을 지고 출자자의 이익 배분에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함
- 공업 등 제한법 폐지 :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도권에 공장, 대학의 증설을 억제하는 것 자체의 유효성이 상실, 2002년 7월에 폐지됨
- 공장재배치촉진법 폐지 : 기업의 공장입지 선정 추세가 보편화되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정을 재배치하는 정책의 유효성이 감소, 2006년 폐지됨

3) “최근 일본 투자 회복의 비밀”,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6년 9월 참조.

< 참고 > 최근 일본 정부의 새로운 고용 시장 정책 트렌드

- 최근 일본정부는 정규직 비중 제고, 공공 부문의 민영화, 고령화 시대의 효율적 인력 활용 등과 같은 고용 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정규직 비중 제고** : 후생노동성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연간 20만 명의 임시, 시간제 근로자들을 상용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2006년 4월말 이미 약 22.5만 명의 상용 고용을 실현함
- **공공 부문의 민영화** : 2007년부터 11개 공공 사업 부문에 대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중 어느 쪽이 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적합한지 경쟁 입찰로 결정하는 방법인 ‘시장화 테스트’를 시행
  - 사회보험청(3개), 직업 소개 관련(3개), 고용·능력개발(2개), 등기 증명서 발급, 통계조사(2개)의 11개 사업
  - 일본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국가 공무원의 6%에 해당하는 1만 9,640명을 감원할 계획인데, 시장화 테스트를 통한 공공 업무의 민간 개방으로 민간 고용이 증가될 전망
- **고령화 시대의 효율적 인력 활용** :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 활용 정책이 시행됨
  - 법정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 지원 : 일본 정부는 ‘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정년을 2006년 62세, 2013년에는 65세까지 연장
  - 계속고용장려금제도 :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고용제도장려금을 마련함
  - 고령자의 재취업 또는 창업 원조 및 촉진 : 고령자 TRIAL 고용 사업 추진, 실버인재센터사업(육아지원사업 등 지역 사회 밀착형 사업) 등 추진, 고령자 등 공동취업기회창출조성금 마련을 통한 창업 지원 등

### 3. 한국 고용 정책에의 시사점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향후 정부의 고용 시장 안정 정책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출총제 등 대기업 관련 규제 완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르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의 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이 시급함

·수도권 규제의 철폐 : 특히 일본 정부의 예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장 총량제를 철폐하여 수도권을 재정비함으로써 기업 투자와 해외 기업 유치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임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이중 과세 금지,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 회복과 투자 여력을 확충시켜야 할 것임

- 기업 활동의 이윤 창출 목적과 기업가의 소유권 보호 중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역할에 대한 정책 및 일반 인식 개선, 경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

- 정부는 불법 노사 분규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간 자율 교섭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임

○ (고용 시장의 유연성 확보) 우리 경제의 고용 흡수력을 감안한 비정규직 관련 노동 시장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최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아직 한국 경제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자칫 이러한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오히려 더 심화시

킬 우려가 있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노동 시장 유연성을 먼저 확보하여 경제 회복 기조가 뚜렷해진 이후 비정규직 축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 (마찰적 실업 축소 정책 병행) 전직 과정에서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재취업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와 실효성 증대가 절실함

- 이를 위해서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취업 정보 시스템 강화 등이 요구됨
- 특히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빠르게 변화되는 산업 구조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유망 산업과 직군에 대한 교육 과정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중장기 인력 활용 방안 추진)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노동력 수요가 증대된 이후의 중장기 인력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우선 청년 노동력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요자 위주의 대학 교육 과정 개편, 직훈 제도의 내실화 등에 주력해야 함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육 육아 시설 확충, 직장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 폐지 유도 등이 요구됨
-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임금 피크 제도, 순환 근무제, 자문역 제도 활성화 등 새로운 노동 형태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직면하게 될 노동력 부족 문제를 대비해야 할 것임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월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내수 회복세 지속

○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 투자의 내수 부문도 회복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5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산업생산 증가율은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3%에서, 4월 6.7%, 5월 6.6%로 점차 높아지는 전형적인 경기 회복 기조를 보임
- 한편 소비 부문의 속보성 지표인 소비재 판매는 1/4분기에 7.1% 증가에서 4월에 4.9% 증가에 그쳤으나, 5월에 다시 6.3% 증가의 호조세를 나타냄
- 5월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2%로 4월의 15.7%보다 하락하였으며, 국내건설기성 증가율도 4월 6.1%에서 5월에 5.5%로 둔화됨
- 현 경기 국면을 판단하는 지표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 100.6에서 5월에 100.4로 낮아졌고,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4월과 동일한 5.1%를 유지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1.2)	4.0(0.9)	4.0(0.9)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7.1	4.9	<b>6.3</b>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11.3	15.7	<b>10.2</b>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6.3	48.9	<b>5.2</b>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4.9	17.1	11.9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3	6.7	<b>6.6</b>
	공급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84	2,352	2,376
		실업률 (%)	3.7	3.5	3.9	3.4	3.3	3.2	3.6	3.4	3.2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2	19.8	13.6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11	7	4	61	-16	-19	-	
	무역수지 (억\$)	232	161	13	48	25	75	28	6	15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0	2.5	2.3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3	2.9	3.1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강세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 금리 상승

- 금리 : 월 중반까지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후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월초 대비 대폭 상승 (국채 10년물 : 4.95→ 5.10%)
- 환율 : 달러화는 월초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 하순들어 미국의 모기지 관련 신용위험 확대 우려감으로 상당폭 약세를 보이며 월초대비 보합으로 마감하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였음 (\$/€ : 1.3449→1.3450, ¥/\$ : 122.1→123.2)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강세

- 주가 : 주가 상승세 지속으로 증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치인 1,806p까지 상승한 후 급등에 따른 부담 및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조정 강세를 보이며 하락세를 보였지만 월초 대비 상승 (1,716.2→1,743.6)
- 금리 : 시중 과잉유동성에 대한 경계심리, 통화당국의 총액대출한도 감축 결정, 경기회복에 따른 하반기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월초 대비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15→5.25%)
- 환율 : 월 초반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물 등의 영향으로 931.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 수요 및 은행들의 외화 차입 지속 등으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월초 대비 하락 (928.4→923.8)

○ (전망) 시중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계감으로 금리 상승세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4/4	1/4	2/4	3/4	4/4	1/4	6.1.	6.29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716.2	<b>1,743.6</b>
	국고채3년(%)	5.08	4.93	4.92	4.57	4.92	4.76	5.15	<b>5.25</b>
	원/달러	1,011.6	971.6	948.9	946.2	929.8	940.9	928.4	<b>923.8</b>
해외	DOW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668	<b>13,422</b>
	Nikkei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959	<b>17,932</b>
	미국채10년(%)	4.39	4.85	5.14	4.63	4.70	4.57	4.95	<b>5.10</b>
	일국채10년(%)	1.48	1.78	1.93	1.68	1.69	1.60	1.78	<b>1.93</b>
	달러/유로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449	<b>1.3450</b>
	엔/달러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2.08	<b>123.18</b>
	두바이(\$/배럴)	53.19	59.16	67.17	57.33	56.71	63.12	63.75	<b>66.16</b>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6.28) 기준